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문답 요지

‘근거있는 접대’로 회계 투명성 높여야

▶ 일자리 창출 비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총론이다. 경제각료와 공무원들이 각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 왜냐 하면 정부가 공장, 호텔 등 레저, 위락단지를 지을 수 없다.

관광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과 업종의 유인책을 위해 정책수단이 수십 가지씩 동원된다. 정부는 그런 정책수단을 묶어서 지원정책, 육성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정책과 제도를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서 투자효율성을 계산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순서인 것 같다. 어쨌든 올해에도 총론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서 정책을 또박또박 챙기겠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줄었지만 고용비율은 더 주는 것 같다. 서비스 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 접대비 근거·기록 의무화에 대해

접대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출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체기업의 접대비가 좀 줄지 모르겠지만 거래와 회계는 투명한 것이 더 큰 가치다. 또 접대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접대, 근거 있는 접대라면 기록이 가능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접대, 투명하지 않은 접대는 기록이 어려울 것이다.

재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이라도 사회의 문화를 건강하게 하고 더 생산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사회를 병들고 퇴폐하게 만드는 재화의 흐름도 있을 수 있다. 결국 가치선택의 문제인데 적어도 접대비 종류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은 민생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기업 경쟁력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아야 한다.

시장논리로 얘기한다면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에 많은 제약을 받는 특수재화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상품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좋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잡으려는 것은 투기이지 부동산에 대한 발전적 투자까지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투기소득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지, 부동산의 단순 매매와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잘 개발해서 지역적으로 효용가

치를 높이고 투자이익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원칙은 투기만 잡겠다는 것이다.

▶ 반기업 정서해소 방안은

시장은 본시 불확실한 곳이다. 경기가 나쁠 때나 장기적으로 활로에 큰 변화가 있거나 위기가 올 때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운명이 갈린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과 민족은 성공하고 불안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냥 주춤거리다가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낙오하는 것이다.

대개 시장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다가왔다. 많은 가게가 적자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장을 흑자로 돌리는 프로세스에 관한 확실한 신념이 담긴 논문도 못 봤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도 못 봤다. 경제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대책과 전망을 안 내놓아서 자꾸만 재촉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망을 정확하게 하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부, 학계, 언론이 중요하다. 저는 된다고 본다.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특히 기업들이 대통령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무슨 말이 기업을 불안하게 했는지 물어보면 별 대답이 없다. 결국 88, 89년 얘기밖에 꺼낼 것이 없다. 그때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적어도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한 일이 없을 뿐더러 당선 이후 1년 내내 기업하기 좋게 했다. 이때까지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과감하게 풀어준 일 없지 않나. 제도 개혁도 참여정부의 속도가 늦지 않다. 과감하게 풀어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면 좋겠다.

▶ 일자리 늘리기 및 교육개혁 방안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대통령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또 국민의 정부 때 참여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사례를 많이 얘기하면서 분석했는데 지금은 유한킴벌리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 산하 연구원에 연구비를 배정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업종과 참여업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평균적 수준의 공공부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문화·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면서 아울러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투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과 인력이다. 그래서 대학교육이 기업수요에 맞게 되도록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고, 제도를 바꾸면서 각 대학에 영향을 끼쳤다. 새해부터 대학에 연구지원을 할 때 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산업기술 대학 현장에 갔던 일도 그런 흐름을 만들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해서 대학총장들과 함께 토론회, 보고회를 했던 핵심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정책과 전략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말했다.

사교육비 부분은 아직 완벽한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수지는 물길에 독을 막으면 되는데 아무리 막아도 위에서 비가 계속 오면 넘치게 돼 있

다. 그래서 물넘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래에 물 빼는 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도 비가 심하게 오면 아무리 막아도 넘치듯이 지금 한국의 교육 열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계속 넘치게 돼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 LG카드 사태에 대한 논란은

이것은 대통령이 대답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질문 아닌가 싶다(모두 웃음). 그 당시 카드채가 87조, 89조, 약 90조 정도의 부채들이 맞물려 지불정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몇몇 분들과 논의하며 ‘사실상의 조정력을 쓰자, 다만 수단에 이러저런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이 뒤에 시장에 부담을 주거나 교란시키거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다. 모든 결정에는 이후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원리를 훼손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약간의 부담은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때 판단했던 사람들의 견해인 것 같다.

그 당시 연체채권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파악됐느냐 안됐느냐 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당시 각 카드사가 출자해야 되는 출자부담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감독에 관한 문제인데 그 이후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잘 안 풀리니까, 말하자면 4월 달에 그 조치를 할 때의 예측보다 그 이후 경제상황이 잘 안 풀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쁜 쪽으로 다가가고, 따라서 판단도 소극적으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지난 번 보다는 충격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차마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정부가 완전히 외면하고 손을 뗍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문가 집단에 맡겼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동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겠다.

▶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를 좀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도 있다. 불신도 항상 과장되게 돼 있고 신뢰도 때로는 과장되거나 착오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불신을 털어내는 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랫동안 불신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끼리는 푸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재계도 그렇지만, 노동계도 그렇다. 제가 한 말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들에게 마치 무슨 절제를 요구하거나 책망하듯이 말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노동운동을 앞장서서 지도해야 될 사람들, 전체를 불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노동자보다 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그것은 장기적으로 다 잘되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해 준 것이다. 전체 노동자적 관점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를 걱정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 말에 그렇게 섭섭해 하지 않을 것이다.

▶ 한·칠레 FTA와 고액권 발행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할 생각이 있는지. 아울러 시민단체의 역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FTA는 최선을 다하겠다. 스크린쿼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 나가겠다. 고액권 발행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때 꼭 제 의견을 가지고 판단할 생각이다. 시민단체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는 특별한 권력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장과 방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역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